

다산포럼



김순국
세명대 명예교수
전 고전문학회 회장

독일의 시인이자 극작가인 브레히트(Bertolt Brecht, 1898~1956)는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란 시에서 모스크바에서 병사한 스테판, 스페인 국경에서 자살한 뱀아인 등 먼저 간 친구들을 기리며 "오직 운이 좋았던 덕택에/ 나는 그 많은 친구들보다 오래 살아남았다."고 말했다. 그런데 꿈속에서 죽은 친구들이 나타나 "강한 자는 살아남는다"고 하자 "나는 내가 미워졌다"고 했다. 험거운 시대를 함께 하지 못하고 친구들을 먼저 보낸 죄책감 때문일 것이다.

이 시는 1980년 '광주' 이후 시대의 분위기를 대변하는 '키워드'가 되었다. 그리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도 '살아남은 자의 슬픔'은 되풀이됐다. 304명의 어린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고 바다 속으로 수장시킨 죄책감에 온 나라가 슬퍼해야 했다.

그런데 같은 일이 올해 또 반복되었다. 10월 29일 이태원의 헬리콥터 추락에 참여했던 158명의 젊은 생명들이 길바닥에서 압사당해 죽음에 이른 것이다. 사망자는 내국인이 132명, 14개국의 외국인이 26명이었다. 군인들에 의해 총칼로 죽었거나 배가 침몰하여 바다 속에서 익사한 것이 아닌 유가족의 말처럼 "그냥 길을 걷다가 죽은" 것이다. 이 침팬지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러기에 11월 22일 있었던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한 유가족은 "이태원 참사는 총체적 안전 불감증에 의한 간접 살인"이라고 절규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자 행정당국은 참사가 일어날

'살아남은 자의 슬픔' 혹은 분노

당시 늦장 대응으로 비난을 샀던 것과는 달리 기만하게 대처했다. 우선 사태를 규정 짓는 용어를 '압사'나 '참사'가 아닌 단순 '사고'로 명명하고 '이태원 사고' 대책 본부를 구성한 뒤, CCTV를 뒤져 토끼 머리피 장식의 인물을 찾기도 했다. 158명이 죽은 참사를 왜 그렇게 '사고'로 축소하려 했을까?

그리곤 10월 31일~11월 5일의 일주일간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해 전국 각지에 분향소를 설치해 따지거나 비난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들에게 먼저 애도하자고 했다. 죽은 자들을 추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추모'나 '근조(訃報)'라고 쓰인 글씨를 뒤집어 달도록 했다. 행정안전부에서 국가 애도 기간 중 전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애도를 표하는 '검은색 리본'만을 패용하도록 안내했다고 한다. '추모'나 '근조'의 표지도 없이 어떻게 추모한다 말인가.

더욱이 각 지역에 설치된 분향소에는 추모해야 할 유폐도 영정도 없었다. 11월 28일 유가족 65명의 명의로 발표된 성명문에서도 "유가족들의 의사를 전혀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유폐 없는 합동 분향소를 운영하고, 추모기간을 설정하였다"고 당국을 비난했다. 애도 기간과 분향소 설치 일종의 '면피용' 요식 행위였던 셈이다. 과연 누구를 위한 추모인가?

게다가 희생자 부검과 유류품을 통해 마약 관련 검사를 진행했음이 최근에 밝혀졌다. 사건의 원인을 행정력의 부실 대응이 아닌 마약으로 몰고 가려한 혐의가 짙다. 2차 가해인 셈이다.

158명의 유가족들은 서울, 경기 지역 39개 병원에 분산 안치된 자신들의 죽음이 어느 병원에 있는지조차 몰랐다 한다. 그리고 다른 유족들의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았다. 서울시가 유족 정보를 발설하거나 공유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게다가 행정안전부에서는 첫 모임 이후 유가족과의 면담을 통해 동태를 파악하고 서로의 만남을 방해했다. 흑시라도 세월호처럼 집단적으로 대응할까봐 겁을 냈던 모양이다. 그래서 유가족들은 서로 위로받지 못하고 고립된 채 끔찍한 슬픔과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 했다. "유족 모임을 구성하거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공간도 없었고, 사고 발생 경과 등 기본적인 안내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158명 유가족을 각개 분리해서 장례를 치르면 사태가 진정될 줄 알았나 보다. 하지만 생애같은 자식의 어이없는 죽음을 어찌 쉽게 잊겠는가.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데, 어느 부모라고 그 죽음을 잊겠는가. 그러기에 참사 24일 뒤인 11월 22일 우선 34명의 유족들이 '민변'의 주도 아래 처음 모여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부에게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를 묻기 위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요구한 것이다.

거기서 "이제 나라입니까?"라고 절규하며 살아남은 유가족들의 슬픔이 분노의 목소리로 터져 나왔다. 유가족들은 대통령과 서울 시장이 분향소 보낸 화환을 부수기도 했다. 그 뒤 11월 28일에는 65명의 유가족들이 "자발적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은 희생자들에게 "뜻밖한 가족이 되고 싶다"며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며, 책임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고자" 했다. 12월 10일에는 과반이 넘는 89명의 유가족이 모여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협의회(가칭) 창립 총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협의회를 출범시켜 시민들에게 "함께 서주시길" 당부했다. 슬픔과 분노가 '함'이 된 것이라.

우리의 '헌법' 제 34조 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태원역 1번 출구 추모 공간에는 지금도 '막을 수 있었다. 국가는 없었다'는 글이 붙어 있다. 아,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는가!

청춘 특특



김우진
광주대 사진영상드론학과 4년

"버킷 리스트를 가지고 있나요?" 겨울 방학을 앞둔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던진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됐다. '버킷 리스트'는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나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한 리스트다.

나의 버킷 리스트는 무엇일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1~2학년에는 분명 버킷 리스트가 존재했다. 해외여행, 지리산 등반, 한라산 올레길 트레킹 등 너무나 많은 것을 생각했다. 하지만 3~4학년이 되니, 버킷 리스트가 취업이다. 다른 버킷 리스트를 생각해 본다면 취업 전에 혼자 여행을 떠나는 것이다.

나는 지금 대학 마지막 겨울 방학을 보내고 있다. 이제 졸업이다. 현재에는 학교에서 연계해 온 진로·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를 얻었다. 운이 좋았다.

이번 겨울엔 버킷 리스트 실현을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생들을 포함한 청년들은 취업에 대한 고통 지수가 매우 높다. 이유는 치솟는 급리로 인해 집을 구하는 것도 힘들고, 전공과 관련된 곳에 취업도 힘들기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을 수치화한 경제 고통 지수를 토대로 '세대별 체감 경제 고통 지수'를 계산한 결과, 15~29세 연령대가 25.1로 나타나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료를 보면 청년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고통 가운데 '물가 상승'이 가장 큰 몫을 차지했으며 이어붙은 취업 시장도 어려움을 더했다.

현재 청년들이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라디오 한 언론사의 아나운서가 '소아과 전공의 지원율이 낮다'는 뉴스를 전하며 "일반 기업에서는 기피 부서에 성과급을 더 내어 주는 등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번에도 문제가 발생한다면 사회가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사실 청년들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한 답은 정해져 있다. 청년들의 취업을 보장하고 물가에 적합한 연봉을 책정하면 된다. 그리고 노동 시간을 지켜주며, 집값 걱정이 없이 집을 구입하게 해 주면 청년들은 행복하다. 꿈 같은 이야기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현실과 다르다.

청년들이 고립되고 있다는 뉴스도 눈에 띈다. 코로나와 경제지표 악화 등으로 인해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한다. 취미를 누릴 수 있는 생활은 생각도 못한다. (오로지 먹고살기 위한 취업에만 집중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졸업을 마르는 친구들도 증가하고 있다. 매년 악순환이다. 지난해에도 졸업을 마르며 취업문을 두들기는 선배들이 있기에, 올해와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과 경쟁을 해야 한다. 내년에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 주려 한다는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한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책이 화두로 떠오른 시절이 있었다. 논쟁도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의 논쟁처럼 '아프면 환자지, 뭐가 청춘이냐'가 정답이 되어 버렸다.

올해 겨울에 버킷 리스트를 실현하고 싶다. 서두에서 말한 취업 전 혼자 여행 떠나는 것.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것이다. 이에 대한 노력을 정당하게 인정받고 싶다. 정부와 지자체도 조금 더 통합적으로 청년의 문제를 바라보고 개선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

기 고



양관수
소설가

사랑을 할 때 자본은 커다란 몫을 한다. 가난한 남자는 사랑을 할 수 없다는 푸념이 나오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른바 '사랑 자본론'이다. 이러한 말이 지금에 와서야 떠도는 건 아닐 것이다. 사랑의 상품화는 태국적부터 전래되어 온 사회적 현상이었다.

사랑이라면 남녀 사랑이 으뜸이다. 남녀 사랑이 선행되어야 부모 자식 사랑으로 이어진다. 사랑은 존재의 본질이라 할 '중추 보전 행위'와 연관된다.

가까워진 여자에게 스킨십을 하고 싶은 것은 사랑에 빠진 남자의 본능이다. 일종의 '섹슈얼리티'다. 수많은 사랑학개론이나 사랑을 다룬 책에 따르면 여자는 성적 본능에 무조건 충동적이지 않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남자가 얼마만큼 성실한가를 먼저 가능하려 한다. 성

선물과 사랑

실한 남자가 여자 곁을 떠나지 않고 잘 지킬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훗날 태어날 애가 잘 자라도록 뒷바라지도 정성껏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남자의 성실도 가능자 가운데 하나가 선물이다. 필자가 보기에 남자가 아무리 착해도 선물하지 않으면 여자는 외면할 것 같다. 여자에게 건네주는 선물에 따라 '저 남자가 이제부터는 나에게 성실하려 노력하는구나'라고 여자는 판단할 수도 있다. 물론 선물이 모든 것을 좌우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우선은 물질적으로 넉넉해야 애를 잘 키울 수 있다는 게 여성적 본능이 아닐까 싶다. 이처럼 집단화된 의식의 차이에선 남녀의 괴리가 발생한다. 오래 전 '남자는 늑대, 여자는 여우'라는 말이 통용된 적이 있었다. 그러한 남녀의 틈을 좁히고 합치시키는 힘을 선물이 가지고 있다. 내놓는 선물이 다소 미약한 남자라도 성실하고 충실한 태도로 준비한 거라면 감동을 주기 마련이다.

현대인들 앞에 널린 선물들은 대체로 값이 비싸다고 봐야 한다. 경제적 능력이 어색한 남자들은 허리 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뭍' 부러지고 만다. 그런 탓일까. 드라마나 영화 속 여주인공은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게 보이는 남자를 사귀려 하지 않는다. '사랑 자본론'을 들

먹이는 남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사랑에는 이성보다 감정이 앞선다. 선물을 주고받는 건 사랑이라는 두 감정이 벌이는 냉철한 밀당이다. 어떤 남자들은 사랑하고 싶은 여자가 나타나면 선물부터 한다. 사랑을 표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선물이 크든 작든 '당신을 지키고 당신이 낳은 애를 잘 키울 수 있다'라는 은근한 과시일 수도 있겠다. 물론 같은 값이면 선물을 비쌀수록 좋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는 여자에게 선물하는 남자는 거의 없을 것 같다. 이후 여자가 선물을 준 남자에게 뭔가를 갚아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된다. 수많은 책과 드라마, 영화에서 봐왔던 대목이다. 즉 '값없는 역사, 영원한 고전'이 성립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집단 무의식이라 한다. 이는 칼 마르크스가 내세운 '유물사관'과도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진다.

이러한 현상의 근거를 생물학적으로 제시한 책이 있다.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인 유전자'다. 제9장 '암수의 다름' 편을 읽다 보면 유추 가능하다. 물론 독자에 따라 다르게 읽기도 하겠지만.

맘에 드는 한 여성에게 선물을 주는 남성이 되는 건 어렵까.

社說

천정부지 치솟는 물가 전방위 대책 강구해야

삼겹살과 짜장면 등 광주 지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요 외식 품목 가격이 지난 해보다 10% 안팎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 요급 인상에 배달 음식 가격도 고공 행진을 하고 있다. 전가·가스 요금에 이어 먹거리 물가까지 들썩이면서 서민들 사이에선 '안 오른 게 없다'는 하소연이 절로 나온다.

한국소비자원 가격 정보 사이트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 지역 삼겹살(국산·200g) 평균 판매가는 1만 4444원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11.4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감치찌개 백반은 7800원으로 지난해보다 9.86% 올랐고, 짜장면은 8.77% 인상된 6200원으로 파악됐다. 평균 가격은 11.11% 오른 8000원이었다. 평균 가격 기준 짜장면 6000원, 칼국수 8000원 시대가 열린 것이다.

배달 음식 물가는 이보다 더하다. 프랜차이즈 치킨의 경우 가장 저렴한 메뉴가 1만 6000~1만 8000원으로, 배달비 3000~5000원을 포함하면 2만 원을 훌쩍 넘어

한다. 피자도 주요 제품은 3만 원에 육박한다. '서민 음식'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서민 가계를 옥죄는 것은 외식비만이 아니다. 도시가스(가정, 취사) 소비자요금은 월 1만 67원으로, 지난해보다 38.93% 올랐다. 광주의 고등학생 학원비는 전년 대비 4.8% 인상됐다. 문제는 고물가가 내내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당장 전가·가스 요금이 올해의 두 배가량 인상될 예정이다. 광주 지역 택시요금 인상도 논의 중이다.

치솟는 물가는 취약계층부터 파고든다. 특히 먹거리는 소비를 줄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급등한 가격은 서민들에겐 '세금'이나 다를없다. 내년에도 물가 상승이 지속된다면 서민 경제는 붕괴 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전방위적인 정책 대응에 나서야 한다.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고 예산과 행정력을 민생 안정에 집중 투입해야 할 것이다.

철새 급증 '영산강 벨트' AI 확산 차단 총력을

해마다 수많은 철새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 시베리아 등지에서 한반도를 찾는다. 철새들의 활동지는 한동안 청정한 친환경 지역을 상징하기도 했다. 해질녘 장관을 이루는 철새들의 군무를 보기 위해 일부러 주요 서식지를 찾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철새들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를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잠재적 유해 조류로 전락하고 있다.

최근 월동을 위해 전남 지역을 찾은 철새 개체수가 급증함에 따라 고병원성 AI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전남도에 따르면 환경부가 최근 조사한 철새 개체수·지역별 분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내 겨울 철새 개체 수는 30만 7000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28만 4000마리)보다 8% 증가한 것으로 관측됐다.

이 가운데 고병원성 AI 전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오리과 철새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늘어난 27만 5000마리에 달했다. 철새들은 10월에는 영암호·진도

군내간척지·강진만, 11월에는 영암호·순천만·고천암호에서 주로 머물렀다.

한데 나주·영암·무안·함평 등 일명 '영산강 벨트'에는 가금류 사육 농장들이 밀집해 있다. 방역 당국은 이들 지역에 AI가 잇따르는 원인으로 철새들이 서식 환경이 좋은 영산강을 따라 옮겨 다니며 먹이 활동을 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매년 이맘때 영암호를 찾는 고방오리가 기존 철새들과 접촉해 바이러스를 퍼뜨릴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철새들의 이동과 접촉은 AI 전파 가능성을 높이는 만큼 미리 바이러스의 확산 경로를 예측하면 효율적인 방역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방역 당국은 철새들의 월동 습성과 이동 경로를 잘 파악해 고병원성 AI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영산강 벨트'를 따라 몰려 있는 가금류 사육 농가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검은 호랑이의 해인 임인년(壬寅年)도 이제 점차 저물어 간다. 돌이켜 보면 올해는 정점으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컸다. 지난 5월의 대통령 선거는 온갖 네거티브 공세로 얼룩지면서 말 그대로 '역대급' 비호감 구도로 치러졌다. 민심은 극명하게 갈렸고 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가장 박빙인 0.73%포인트(24만 7077표) 차이로 신승을 거둔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하지만 비호감 대선에서의 초점점 결과는 '중요의 정치'라는 후폭풍으로 나타났다. 여권은 여소야대의 상황 속에서 협치보다는 법치를 지향대로 제1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하고 있다. 전 정권인 문재인 정부의 정책 지우기도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건전한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미뤄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모토인 공정과 상식의 기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기에 경제·외교·안보 등 국정 전반에 있어 민심의 신뢰를 얻을 만한 능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크다.

제1 야당인 민주당의 현실도 딱하다.

167석의 과반 의석을 넘는 거대 정당임에도 이제명 대표를 둘러싼 '방탄 프레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만 나면 민생을 강조하지만 '사법 리스크'에 번번이 묻히고 있다. 지난 대선 패배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기도 하다. 사법 리스크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 대표의 정치적 결단 없이는 민주당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여야의 정책 구도가 격화되면서 민생은 멍들다 못해 무너져 가고 있다. 코로나19의 여운도 그림자는 여전히 고물가, 고금리, 고금리가 서민을 지탱대로 제1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하고 있다. 전 정권인 문재인 정부의 정책 지우기도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건전한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미뤄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모토인 공정과 상식의 기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기에 경제·외교·안보 등 국정 전반에 있어 민심의 신뢰를 얻을 만한 능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크다.

/임동욱 선임기자 겸 이사 tu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지국 (구청 신청 배달 안배))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52	예 향 부 220-0692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경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21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전 남 본 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